

주요업무보고

2019. 4.

시장비서실

I. 일반 현황

1 주요 기능

- **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**
 - 시장 공약사업 등 시정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 지원
- **민생현장 중심 시장 일정기획 및 시정 메시지 지원**
 - 민생문제 및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 시민 중심 일정 수립·추진
 -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성과 홍보를 위한 메시지 지원
- **시의회 및 국내·외 기관 소통·협력 가교 역할**
 - 시의회,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,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소통 및 협력 확대

2 인력 현황 ('19.3.31. 기준)

(단위 : 명)

구 분	총 계	일 반 직					별 정 직				
		소계	5급	6급	7급	8~9급	소계	2~3급	4급상당	5급상당	6급이하
정 원	22	6	2	2	1	1	16	1	2	11	2
현 원	22	6	2	2	0	2	16	1	2	11	2

※ 전문임기제 3명(행정안전부 협의완료) : 민생정책보좌관, 공보특보, 젠더특보

3 예산 집행현황 ('19.3.31. 기준, 단위 : 천원)

● 과목별 집행현황

구 분	예 산 액	집 행 액	잔 액	비 고
계	357,200	87,182 (집행률 24.4%)	270,018	
기관운영업무추진비	277,200	58,964 (집행률 21.3%)	218,236	조직운영, 홍보 및 대민활동, 유관기관 협조, 직책수행 등 제반 경비
시책추진업무추진비	80,000	28,218 (집행률 35.3%)	51,782	주요행사, 시책사업,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

Ⅱ. 주요 업무

1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

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민생 분야의 현장방문을 추진하고, 자치구와 사안별 소통·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정책체감도 제고

추진 방향

- 시기별·현안별 민생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기획
- 자치구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시책사업의 체감도와 성과를 제고

추진 내용

- 주요 정책 테마별 민생돌봄 현장방문 추진
 - － 주제별(경제·안전·관광 등) 현장방문을 통해 시책사업 추진력 확보
 - － 직접 체험 및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점 진단 및 현장목소리 시정에 반영
- 시와 자치구간 ‘소통 협의체’ 운영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방안 모색
 - － 시-구 간담회(수시), 구청장협의회(격월) 등 소통 정례화
 - － 자치구 주요 숙원사업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장-구청장 면담 실시(수시)
- 시-구 공동협력으로 안전사고, 미세먼지 대책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
 - －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개최(매월), 자치구 핵심과장 실무 현안회의 개최(수시)
- 시와 자치구 협력 행정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
 - － 정부 지방자치박람회 공동참가(10월),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 개최(12월)

향후 계획

- 주제 및 계절별(하절기 등) 민생현장 방문 : 연중 계속
- 시책사업 추진 및 현장목소리 수렴을 위한 시-구 소통활성화 : 연중 계속

2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

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층 강화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로, 천만 시민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책임시정 구현

추진 방향

- 시의회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 및 스킨십으로, 시정에 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현

추진 내용

① 정기·수시 소통활동 지속 추진

- (수시소통) 시의회와 소통 및 스킨십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간담회, 워크숍, 시의원 개별면담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업무협의 추진
- (정기소통) 회기 개회 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안건의 사전 설명을 위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개최 정례화
- (현장소통) 민생과 현장에 정통한 의원들과 지역 현안 공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 행사나 회의 시 적극 안내하여 대화·소통 채널 마련

② 의회와 원활한 정보공유 활동 강화

- (정보공유) 기자설명회 및 언론보도자료 배포시 소관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, 의장단, 관련 지역 시의원 등에게 공유 및 사전 설명 의무화

향후 계획

- 시정 추진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 활성화 : 연중 계속

3

실질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에 역량 집중

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등 각종 분권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 맞는 지방분권 확립을 위하여 제도별 대응방안 마련·추진

□ 추진 방향

- 올해 개정 시행되는 분권정책별로 선제적 대응하여 성공적인 제도 안착
- 분권 협력 네트워크와 공조 및 시민참여를 통한 '시민과 함께하는 지방분권' 추진

□ 중앙정부 주요 동향

-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「자치분권 시행계획」 수립·통보('19.3.)
※ 자치분권위원회 「자치분권 종합계획」('18.9.) 후속 세부시행계획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('19.3.) → 4월 국회논의, 심의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일부개정 시행('19.3.) :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(7월 예정) 등
- 정부보조(균특회계) 축소 대상사업 검토(기재부 행안부) 및 지방정부 의견 수렴('19.2~4.)
- 「지방이양일괄법」 12개 소관 상임위 검토 완료 및 운영위 소위원회 상정('19.4.)
- 자치경찰제 「경찰법」 및 「경찰공무원법」 전부개정안 의원발의('19.3.) → 사개특위 심의

□ 추진 내용

- 자치분권 현안 논의를 위한 시의회 및 타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
 - 시의회 지방분권TF와 간담회('19.1), '전국지방분권협의회 서울시회' 개최('19.3.)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 및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정 촉구 등 대정부·국회 건의
 - 3급이상 기구수 및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 자치조직권 관련 시도협 의견서 발표('19.1)
 -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정 관련 시도협 국회 건의('19.1), 지방4대협의체장 결의('19.3)
 - 정부 「자치분권 심포지엄」 시 '지방의회와 자치경찰 발전과제' 토론 참여 및 건의('19.3)

□ 향후 계획

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 정부 분권정책 추진에 맞춘 분야별 대응

- ‘지방자치법’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및 추가 개선사항 반영 지속 건의
 - 지방의회 독립성 및 주민참여 강화 등이 반영된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(시도협과 협업)
 - 3급이상 기구수 등 지방정부의 조직 설치·운영 자율성 확대 등 미반영 사항 지속 건의
- 재정분권 확대 및 정부보조(균특회계) 축소 시 지방정부 의견수렴 건의
 - 정부 재정분권계획(지방소비세율 '19년 15%→'20년 21%로 인상 등) 확실한 이행 요구
 - 균특회계 지방 이양시 지방정부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방 의견수렴 및 참여 건의
- 지방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촉구 및 추가 이양사무 발굴·건의
 - 이양일괄법 국회 통과 촉구 및 미반영된 이양요청 사무('17~'18년 95건) 추가 이양 건의
 - 사무이양에 따른 서울시 부담비용 추계 연구용역 선제적 진행('19.4~7)
- 서울시 자치경찰준비TF 운영으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('19.4~)
 -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사항(인력·재정·사무·공간 등)에 대한 사전 준비
 - 생활안전·교통 등 일반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연계 서비스 강화방안 검토

〈서울시 자치경찰준비 TF 구성안〉

- 단장 : 기획조정실장 ■ 운영주기 : 매월 1회 이상 개최
- 구성 : 자치경찰자문단(10명 내외) 및 2개 팀(제도기반·사무협업), 경찰청 연계·협업
- ※ 제도기반팀(법규·예산·인력 등 9개부서) / 사무협업팀(여성·청소년·교통 등 사무관련 11개 실·국)

② 대내·외 분권 네트워크와 협력 및 시민참여로 시민과 하나되는 지방분권 조성

- 市-시의회-자치구-타 지자체와 공조체계 강화하여 대정부·국회 대응
 -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간 협의체와 함께 국회·대정부 합동 방문 건의 등
- 전문가 위주에서 탈피, 시민들이 참여하는 ‘주민자치주간’ 행사 추진('19.10)
 - 시민참여행사(시민원탁회의 등) 추진으로 ‘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’ 공감대 형성

4 시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

계획부터 실행 및 평가까지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정립하고 운용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성 확산

□ 추진 방향

- UN SDGs 시대에 적합한 시민주도의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 재정립
 - ※ UN SDGs : '30년까지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·포괄적 목표

□ 추진 내용

- '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2030' 지표 개발 ('19. 3.)
 - UN이 제시한 보편적 목표 및 지표를 반영하여 서울에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
 - 17개 목표, 96개 세부목표 및 이를 측정할 수 있는 126개 지표(안) 수립
- 「'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」 수립 ('19. 3.)

주요 내용

- 추진체계 재구축 : 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·이행 계획 수립
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2030 지표 개발
- 평가체계 운영 : 지속가능발전지표평가 / 이행계획 성과평가 / 중장기 행정계획 평가
- 지속가능발전 확산 : 서울전환컨퍼런스 개최,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컨설팅

- 「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·이행계획 수립」 용역 착수보고 ('19. 3.)
- 시정 전반 지속가능성 평가 ('19. 3. ~ 6.)
 - 경제 / 사회 / 환경 분야별로 목표 대비 달성도 기관 자체평가 실시
 - 향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도로 평가결과 상세분석 계획

□ 향후 계획

-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 평가 : '19. 4. ~ 5.
 - 지속가능발전지표 통계치와 시민 체감도 차이, 시민 선정 우선순위 지표 등 조사
- '서울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2030' 시민 토론회 개최 : '19. 4.
- 시민참여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: '19. 4.
 - 시민 대상 지속가능발전정책 성과 평가 및 숙의를 통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발전 방향 정립
- '2019 서울전환컨퍼런스' 개최 : '19. 4.

5

2032 하계올림픽 서울-평양 공동 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

2032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활동을 통해 서울-평양 간 문화·예술·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

□ 추진 방향

-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서울-평양 협력체계 신속 구축
- 올림픽 공동유치 활동 계기, 다방면의 교류협력 기회 모색

□ 추진 계획

-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서울-평양 상시협력체계 구축
 - 올림픽 공동준비를 위한 서울-평양 간 실무협의체 결성
- ‘서울-평양 공동협력단’ 활동 전개
 - IOC 실사 대비 대회 기반시설(경기장, 숙박, 교통, 의료시설 등) 공동 점검
- 올림픽 공동유치 연계, 서울-평양 체육문화예술 교류협력 확대
 - 서울-평양 축구대회, 교향악단 합동공연 등 올림픽 공동유치 기원행사 개최



□ 추진 내용

- 「서울-평양 공동협력단」 구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협의 진행 ('19. 2. ~ 3.)
 - 통일부 등 유관부처 서울-평양 간 올림픽 의제 포함 협의채널 구축 필요성 동의
 - 「서울-평양 공동협력단」 역할,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의견 교환
 - 북측 제안시기, 대북협의 방안, 부처 간 역할분담, 향후 추진일정 등 조율
- 2032 서울-평양올림픽 성공적 유치를 위한 서울시 남북체육교류지문단 구성 추진
 - 지속가능한 서울-평양 체육교류사업 발굴 및 올림픽 공동유치 국내외 홍보 등 지원
 - 남북체육 전문가, 남북단일팀 유경험 선수 및 감독 등 10명으로 구성 (5월 위촉)

□ 향후 계획

- 2032 하계올림픽 서울-평양 공동협력단 구성 추진 : '19. 5. ~
- 올림픽 공동유치 연계 서울-평양 교류행사 추진 : '19. 7. ~
- 시민 참여행사 추진 등 공동유치 분위기 조성 : '19. 7. ~